

7월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하반기 돌입

교육위원장 누가 뛰나?

현재 진형석 의원 단독... 박정희 의원은 문승우 의장 당선 위해 출마 포기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하반기 교육위원회는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교육청의 교육국, 행정국, 정책국의 3개국과 도내 시·군 교육지원청, 그리고 직속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연수원, 과학교육원, 미래교육연구원, 전주교육문화회관, 군산교육문화회관, 익산교육문화회관, 남원교육문화회관, 김제교육문화회관, 부안교육문화회관, 학생수련원, 학생해양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직원수련원의 13개 직속 기관을 관장한다.

정희 의원은 위원장 출마 의지를 피력했으나 같은 군산 지역구의 문승우 의원의 의장 당선에 출마를 포기하였다는 전언이다.



진형석 의원

진형석 의원은 지역구가 완산동과 중화산 1·2동이다. 전주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졸업 후 전북대 대학원 지방자치학과에서 정치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수여받았다.

11대와 12대 도의원에 연속 당선됐다. 체육활동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비인기 종목인 전북레슬링협회 부회장장과 육상경기연맹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도내 비인기종목 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노숙인 보호시설인 일꾼센터 운영위원과 전주지역 자활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힘없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파하는 가슴 따뜻한 의원 상을 구형하고 있어 주위에서 칭송이 자자하다. 초선인 11대 도의원 시절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고, 12대에 와서는 전반기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맡아 성실한

자세로 의원들과 의정활동에 임하는 등 공무원 활동을 통해 익힌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당 활동에도 온 힘을 다해 일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중소기업 특별위원장을 맡아 중소기업인들의 기쁨 어깨가 되어준 바 있고, 현재는 직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도민들은 "교육위원회가 전북도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정책을 주관하는 위원회로 예산 규모도 크거나 무엇보다 미래 교육을 책임지는 부서를 관장하는 부서이기에 맡은 책임이 막중하데 관록 있는 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내실 있는 운영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교육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 의원은 아직까지 진형석(전주 2선거구) 의원뿐이다. 처음에는 군산을 지역구로 둔 박



지난 27일 취임한 이오숙 신임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전주남부시장 현장 점검을 가졌다.

“지역 특색 분석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 첫 행보... 전주남부시장 현장 점검

지난 27일 취임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20대 이오숙 소방본부장이 취임 첫 공식 일정으로 화재예방 강화지구인 전주남부시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현장형 지휘관으로서 행보를 시작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취임행사를 대신한 것으로, 최근 전주한옥마을 등 주변 관광지 및 야시장 운영으로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전주남부시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시장 관계인에게 화재예방 등 철저한 주의와 경계를 당부하고자 추진했다. 이오숙 본부장은 △IoT 화재알림시설 운영시스템 확인 △비상소화장치, 스프링클러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유

지관리 실태점검 △화재진압 장애요인과 소방출동률 확보 상태 등 화재대응계획을 점검했으며, 상인회 및 전통시장 전문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위험관리와 화재취급감시, 화재예방순찰 등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지도했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앞으로도 도내 화재취약대상의 꼼꼼한 안전관리를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전북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지역의 특색을 분석해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333개 특례 75개 사업 준비상황 점검 | 전북특별법 특례실행 추진상황 보고회

기본 구상·계획 추진 통한 사업 발굴

전북특별자치도는 28일 회의실에서 '전북특별법 특례실행 추진상황 4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날 보고회에서는 올 연말 시행을 앞둔 전북특별법 특례들의 준비 상황 점검과 특례별 성과 도출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번 보고회는 2025년 실행을 목표로 올해 안에 특례시책 마련과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고 시군 핵심사업과 연계해 제도 개혁에 반영, 시책발굴 및 국가 예산 반영 등 앞산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상시 점검 체계 구축에 따른 것이다.

실·국·별 특례별 목표와 특례실행 중 점검 사항을 중심으로 매일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으며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라는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달성과 특례별 성과 도출을 위해 소관부서의 특례별 추진 일정도 과감히 앞당기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달성을 위한 핵심인 15개 지구·특구·단지 조성 특례 중 6개 특례는 올해 12월까지 지구지정 또는 지구지정 신청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또한, 오는 2025년 4개, 2026년 이후 5개 특례는 관련 법 및 시행령 개정, 부처 공모 대응 및 부처 협의의 필요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는 특례로 2025년 이후 지정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를 앞당겨 목표 시점을 조정할 예정이다.

기본 구상 용역 총 37건 중 완료 3건,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특별법 특례실행 추진상황 4차 보고회에 김관영 도지사가 올 연말 시행을 앞둔 전북특별법 특례들의 준비상황 등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추진 중 17건으로 미착수 17건에 대해서는 용역비 확보 및 기관 선정 등 대응방안 마련 후 신속 착수하기로 했다.

조례 제·개정 대상 56건 중 이미 완료된 3건을 포함해 상반기에 15건, 하반기 이후에 41건 준비를 목표로 상반기 내에 조례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세미나 등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례실행 제고를 위한 교수 등 전문

가가 참여하는 세미나·컨설팅은 총 24건으로 5건은 완료됐으며, 상반기 7건, 하반기 12건이 추진된다.

특례실행에 필요한 재원인 국비 확보를 위해 발굴한 국가 예산 사업은 111건 5조297억원으로 2025년 요구 사업은 92건 4조1,773억원 중 국비는 1,827억원이며, 기본 구상·계획을 조기에 수립해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전북 특별법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들을 신속하고 과감히 해소해 오는 12월 법 시행과 동시에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며, “특례와 연계한 국가예산 사업의 부처 설득 활동에 총력을 다해 부처에서 제발 그만 오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찾아가는 열의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지역특화 콘텐츠산업 육성 ‘머리 맞대’

최병관 행정부지사, 전북콘텐트원 찾아 소통 간담회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지역특화 콘텐츠산업 육성 방안 모색을 위해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원장 김성규)에서 직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콘텐츠산업 활성화 및 중흥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게임산업 종사자 정착 및 취·창업 환경 조성 △도내 청년 인턴십 지원 확대 △14개 시·군 문화 소재 결합 가능성 게임 제작 지원 △전북형 게임 페스티벌 개최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게임 기업의 수도권 편중화로 인한 일자리 부족과 청년 인재 도의 유출 문제 개선방안과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전북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은 전국 12개소 글로벌 게임센터 사업 평가 결과 2년 연속(2022년, 2023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24년도 국비 1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2024년 지역 웹툰 작가 양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전북의 문화 콘텐츠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에 기반한 콘텐츠를 발굴·지원이 중요하며 전북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 지역 거점 기관으로 이러한 역할을 적극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북 콘텐츠산업이 더욱 성장하고, 전북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 대책 방안 논의

최형열·김정기 전북자치도의원, 간담회 가저

“의회 차원에서 전북 창업기업 육성 환경 조성 노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5)과 김정기 의원(더불어민주당·부안)은 27일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활성화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이현서 창업지원과장, 전주대 창업지원단 오현성 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업기업 지원 정책과 창업기업 유치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었다.

최형열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의 핵심이 창업기업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이 전북 특화분야인 농생명·바이오, 탄소, 수소, 이차전지 등 유망 기술 창업기업 대상이므로 전북자치도 발전과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기 의원은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창업기업이 성장해 전북자치도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기대한다.”며, “체계적인 창업육성



정책을 통해 창업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와 운영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혁신성장의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가 앞장서고 기업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의회에서도 창업기업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전북자치도 창업기업 육성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만호 기자

김관영 도지사 “갑질 근절, 동시에 의연하게 업무 임해달라”

부처 국가예산 확보, 기재부 제출 최선의 노력 주문

바이오생태계 조성 기업유치 확대·상생 협력 강화

지역 이미지 높은 춘향제 성공 노후유 확산도 당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갑질은 반드시 근절하고, 동시에 의연하게 업무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28일 간부 회의를 열고 최근 조직 내 불화 문제가 확산된 데 대해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해서 솔직한 얘기를 듣고 있다. 간부공무원들은 의연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업무지시를 받는 직원들이 같이해야 할 동료라는 점을 새겨 반드시 소통에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이번 기회를 스스로 성찰하고 쇄신하는 기회로 삼자.”고 갈등해소 의지를 밝혔다.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 “모든 일이 맨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성과가 창출되

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기재부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이달 말까지 모든 간부공무원이 책임감을 갖고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자. 부처 단계 이후 기재부 설득, 국회 소통 등의 활동도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다 함께 민생 살리기 특별대책과 관련해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 등 도민들의 어려움이 쌓이고 있다.”라며, “본예산과 추경에 확보한 민생 지원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시군에도 월별 집행실적을 관리해 주도록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김관영 지사는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도 강조했다. “바이오산업은 전

북자치도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산업이다. 오가노이드 기반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하여 바이오산업을 육성한다는 큰 방향성이 정해진만큼, 바이오기업 유치와 함께 다른 시도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해 도내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가속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아울러 16일 산업부의 재생에너지 공급망 강화전략 발표와 관련해 “우리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해상풍력 확대를 가속화할 타이밍”이라면서, 재생에너지 선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끝으로 남원 춘향제가 △먹거리 부스 지역성인 직영 운영, △입점권 전매 금지, △가계 정착제 등으로 호응을 얻었던 점을 언급하며, “불가도 잡고, 지역 이미지도 높은 남원 춘향제가 미래형 축제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각 시·군에도 남원의 성공 노하우를 공유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尹 거부권 행사’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부결... 자동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법안 부결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자동폐기됐다.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부결이 되자 강하게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의 부결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 규탄한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뉴스